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140 호
의 결 연 월 일	2024. 5. 16. (제 9 차)

의
결
사
항

현대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김 주 현
제출 연월일	2024. 5. 16.

1. 의결주문

현대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하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 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<별지>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.

2. 제안이유

현대자산운용(주)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‘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’가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4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3. 주요골자

가.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금지 위반

☐ 현대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30차 제재심의위원회(2021.9.2.) 심의필
-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(2022.7.13.) 심의필
- 제9차 안전검토 소위원회(2024.5.9.) 심의필

< 별지 >

현대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— 다 음 —

1. 조치내용

☐ 기관에 대한 조치

- 현대자산운용(주) : 과태료 200백만원 부과
 - 조치사유 : 투자중개업자로부터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
 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제8호, 제449조(과태료)제1항제29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제4항제6호, 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, [별표22] 터.

2. 조치사유

가. 투자중개업자의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 운용하는 행위 금지 위반

☐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 등에 의하면

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

□ 현대자산운용(주)(이하 “회사”)는 2019.4.23.~2019.9.23. 기간 중 이탈리아 의료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㉠, ㉡, ㉢, ㉣를 각각 설정하고 운용하는 과정에서

○ 다음과 같이 4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펀드의 설정 및 펀드재산의 운용에 관한 요청을 받고, 요청 받은 대로 4개 펀드 총 520.7억원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- 회사 ***본부 ○○○은 2019.3.27., 6.5., 6.28., 8.28. 상기 4개 펀드를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인 A은행 &&&부 ■■■으로부터 각각 하나은행이 주도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대한 펀드 설정과 동 펀드 재산 운용과 관련한 ●●●●●●(주)와의 총수익스왑(TRS) 계약 체결 요청을 받고,

요청받은 내용대로 2019.4.19., 7.3., 7.19., 9.23.경 상품제안서를 작성하여 A은행에 송부한 후 2019.4.23., 7.4., 7.23., 9.23. ㉠, ㉡, ㉢, ㉣를 각각 설정하였으며,

- 2019.4.29., 7.8., 7.24. 및 9.24. 회사는 동 펀드들의 집합투자재산 전액 (520.7억원)을 당초 A은행이 펀드 설정 시 요청한 재산운용 내용대로 ●●●●●●(주)와의 TRS계약을 체결하고,

동 계약의 증거금 명목으로 펀드 설정액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였음

관계 법규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
제85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

1. ~ 7. <생략>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제449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~ 28. (생략)

29. 제71조(제7호에 한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

② ~ ④ <생략>

□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87조(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) ① ~ ③ <생략>

④ 법 제85조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1. ~ 5. <생략>

6.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명령·지시·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

7. ~ 9. <생략>

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 (제39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음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터. 법 제71조(제7호에 한정한다), 제85조(제8호에 한정한다), 제98조제2항(제10호에 한정한다) 또는 제108조(제9호에 한정한다)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29호	5,000만원

□ 「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」

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,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.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.

② ~ ⑥ <생략>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제16조(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)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(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,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② ~ ③ <생략>

제17조(과태료의 부과)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, 과태료 금액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삭제 <2016. 12. 2.>

제18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.
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.

□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

제3조(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)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(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하여야 한다.
1. ~ 7. (생략)
② 당사자는 제1항 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,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.
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.

제5조(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)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금융투자검사3국
연 락 처	02-2100-2673	02-3145-7848